



## 제 6차 교과서 국회포럼.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지우기에 나선 시안에 대한 국회포럼〉  
-정경희 교수(영산대학교)-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번에 1월 26일에 교육부에서 나온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새 역사교과서 시안'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에서 '자유'가 빠졌다거나 6.25남침, 북한 세습, 북한 인권과 같은 주요 학습요소가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판단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안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역사교과서 시안은 원천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요, 이번 현대사에 꼭지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소주제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갖다 뺐는데, 여태까지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15광복 이후에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생겨났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새로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째, 통일 정부 수립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구실로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학습요소에 '제주 4.3사건'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제주 '4.3사건'은 결코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주 4.3'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대한민국 최초의 총 선거인 '5.1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지른 무력봉기가 발단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 도민들이 다수 희생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주 4.3사건'은 이 시안의 주장처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안은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안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주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남한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승만이 정권욕에서 먼저 단독정부를 세웠다는 이른바 남한 단정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단정론을 내세워서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좌파 역사가들은 1946년 6월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일부를 '정읍 발언'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를 '단정론'이라고 폄훼해 왔습니다. 이 통일지향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것은 정권에 눈이 먼 이승만이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수립한 이승만대통령을 오히려 분단의 원흉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한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습니다.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먼저 사실상의 단독정부를 수립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 자료를 보아주세요. 이것이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되던 당시의 자료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 플랜카드가 위에서 아래로 걸려있는 것이 두 개가 있죠? 왼쪽 것을 보시면 희미하지만 보이실 것입니다. '인민위원회 성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축 인민위원회 설립'이겠지요? 그런데 오른쪽의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른쪽의 플랜카드를 위아래로 내린 것을 보면, 맨 윗부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자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것이 '인민위원회'라는 '회'의 '회'자입니다. 그래서 '회는 우리에게 정부이다'라고 확연하게 쓰여 있어요. 이것은 무얼 뜻하느냐면 46년 2월 8일에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정부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46년 2월에 정부가 수립되었고요. 북한이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했다라는 증거이고요. 그 다음에 46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북한이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토지 개혁'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

가가 모든 토지를 몰수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경작권을 분배하거든요. 토지를 몰수 했다는 것은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유화'한 것이예요. '국유화'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은 국가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46년 2월과 3월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46년 6월에 4개월 후입니다. 북한이 먼저 정부를 세운 이후에 46년 6월에 정읍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우리 남방만이라도 통일의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남한만이라도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련을 철퇴시키자. 소련으로 하여금 우리 땅에서 물러가게 하자. 라고 발언한 것을 가지고 남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네. 이승만의 정권욕이네. 하고 제시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소주제에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넣은 까닭은 무엇이나면 남한과 북한을 대등한 정부로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북한 정권 수립'을 나란히 놓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나면 이 집필기준 이번 시안의 86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남한과 북한이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정부 수립'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이기에 결코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역사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시안의 작업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 시안은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라는 내용을 집필기준에서 빼버렸습니다. 아예 빼버린 것이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국가의 3요소가 있는데 나라로 인정받으려면,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는 4번째 요소인 국제 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 사회의 승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승만 박사가 일찌감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48년 8월 15일 정부수립하기 전에 이미 7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나면, 파리에서 열리는 제 3차 유엔 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단으로 하여금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는데 국제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예요. 그래서 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 가까스로 유엔에서 승인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엔 결의안 195호'입니다.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됐다라는 내용이 잘 안보이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있잖아요? 196결의안을 왼쪽이 영어로, 오른쪽이 불어로 된 것입니다. 나란히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문제가 된 내용이 무엇이나면 맨 밑에 제가 형광펜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안보이실 거예요. 영어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풀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시죠?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해서 'In Korea'라고 되어있어요. 한반도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the only' 유일한 'such government' 이 'such'는 앞에 나온 문장의 'lawful'을 받는 것이예요. 그래서 번역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라고 승인을 한 것입니다. 왜 저것이 'the only' 유일한, 이 들어갔느냐면 우리가 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했고요, 북한은 미리 해놓았지만 우리에게 단독 정부를 세웠다고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우리보다 조금 늦게 48년 9월 9일에 마치 정부를 수립한 척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가 열린 48년 12월은 이미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을 유엔의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개의 정부 중에서

'Korea' 그러니까 DPRK가 아니라 ROK, 대한민국이 'In Korea',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정부라고 승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북한은 불법적인 정부라는 항의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의 승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현재 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 8종 중에 3종이 2013년에 검정을 통과했는데, 그 검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왜곡 서술한 것이 3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 교과서라든가 미래엔 교과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였다'라고 해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부정을 하였고요, 천재교육 같은 경우에 '38도선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해서 공식적인 유엔의 문건과 다른 서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통성을 가르쳐야 할 국사 교과서가 이처럼 앞장 서서 나라의 정통성을 훼손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지난 2015년에 국정 교과서 도입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5 교육과정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은 사실을 서술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사 교과서 시안은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사실을 아예 빼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몇 년 간 국사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좌편향 교과서의 행태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면 '대한민국 깎아내리고 북한 감싸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최대한 깎아내리고 북한은 무조건 감싸고도는 행태, 이것이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국사 교과서에서 검정제가 도입된 것이 2002년인데 그 때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7종이 검정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고질적 병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은 깎아내리고 북한은 감싸기입니다. 교과서 파동이 2003년부터 있었고, 긴긴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집에서 참고 하시기 바라구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현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13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8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학사 교과서였고요, 그때에도 검정을 통과하면서 2013년 검정교과서 중에 5종이 편향적 서술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라면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대등한 정부로 서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부정하는 서술이 있었는데, 그 교과서가 5종입니다. 금성, 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이렇게 5종의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서술을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5종의 교과서가 바로 북한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 북한의 불리한 사실은 전혀 서술하지 않고 아예 빼버리거나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되풀이하는 그런 서술을 하는 교과서, 즉 친북 서술을 하는 교과서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종에서 제가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라면 친북 성향과 반대한민국 성향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교과서는 어김없이 북한을 감싸는 서술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 역사 교과서 새로 나온 시안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깎아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시안은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라는 소주제를 넣었어요. 소주제의 제목 자체가 벌써 '분단의 고착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반공주의와 독재,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반공주의와 독재, 북한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독재, 이

런 식으로 해서 독재라는 말을 둘 다 넣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반공주의와 독재라는 새로운 학습요소를 넣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6.25전쟁 이후 반공과 북진통일을 내세워서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했다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53년의 세계 지도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 확연히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어디 있습니까? 유라시아 대륙 끝에 있는데 이 빨간색은 다 뭐니까? 공산주의 국가이지요?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화 된 국가들, 49년에 중공까지 공산화 됐고, 북한. 여기 보십시오.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빨간 공산주의 국가들, 한반도의 남쪽에 매달려 있는 외로운 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공산주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당시 집권자, 통치자가 반공산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엄혹한 냉전 상황에서 반공산주의의 기치를 내건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공주의로 낙인찍어버리는가 하면,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이 반공을 빌미로 독재를 합리화 했다는 것이 좌파 역사학계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좌파의 인식을 이 역사교과서 시안이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와 유신 이후의 박정희 정부, 이 둘의 정치체제는 정치학적으로 볼 때 독재라기보다는 권위주의 체제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안은 한사코 독재라는 용어를 고집합니다. 이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독재로 낙인 찍으므로 써 대한민국 자체를 깎아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가 쪽 독재를 했다는게 되니까요. 그리고 북한도 독재를 했다고 하면 남북한 피차 마찬가지로 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시안은 남북한을 동급의 독재정부로 만들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안에는 반공주의와 독재 외에도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라는 학습요소를 새로 넣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기 남한에는 반공주의와 독재, 북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독재라고 해서 이것도 새로 넣었는데요, 이는 남한과 북한이 둘 다 독재를 한 것으로 교과서에 서술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장치입니다. 남북한을 분단정부로 규정해서 남한과 북한을 동격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독재로 규정해서 동급의 불량체제로 서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소련의 경우를 보십시오. 거둬낸 피의 속청으로 나라를 거대한 수용소 군도나 다름없이 만들었던 소련의 스탈린,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아래 수천만 명을 희생시킨 중국의 마오쩌둥, 3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굶어 죽게 만든 북한의 김 씨 왕조, 이 셋과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같은 독재자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북한의 삼대세습 독재정권이라는 최악의 전체주의 정권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동급의 독재체제라는 것이 과연 역사적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깎아내리기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깎아내리기는 또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관한 것인데요, 이번 시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한민국 깎아내리기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이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것을 부정하는 집필 기준입니다. 우리의 고도 경제 성장마저 깎아내리겠다는 것이지요. 이번 표에서 보시면요, 이것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5 교육과정에서는 눈부신 고도 경제 성장을 살펴본다고 돼 있는데, 이번 시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고 하니 "경제 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 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파악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안의 내용이 뭐냐면요, 당시의 세계경제 상황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도 그 누가 집권했어도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도약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 즉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일구어낸 성취가 아니라면 그것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파악해야 할 것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빛바래게 만드는 이 시안의 저의 입입니다. 왜 이런 시안을 만들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안에 이런 집필 기준을 넣은 저의는 뭐냐, 잘 알려진 대로 한국 현대사를 설명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산업화 대 민주화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구도가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런 산업화 대 민주화라는 구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은 집권 말기에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를 보였지만 두 대통령에게는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이지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공로가 있다는 게 바로 산업화의 공로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안은 두 대통령의 공과 과 가운데 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농지개혁, 교육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의 산업화의 공로를 가능한 한 역사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시안은 두 대통령의 공과 과 가운데 과를 턱없이 부풀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옛 소련이나 중공, 북한 등의 공산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와 동급의 독재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야만 역사교과서에서 민주화 운동을 반 독재투쟁으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반공을 내세워 독재를 자행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독재자요 분단세력으로 몰아가야만 민주화의 공로를 좌파가 오롯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시안이 한국 현대사 집필 방향에 절반 가까운 것을 이른바 민주화에 할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안의 86쪽에 보면 민주화 관련 집필 방향이요, 현대사 집필 방향이 일곱 문장인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세 문장이 민주화에 받쳐지고 있어요. 이 민주화 관련 집필 방향을 보면 좀 있다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월 민주항쟁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오로지 독재만 있었다, 그래야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6월 항쟁 이후에야 나오는 것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 1987년까지 자그마치 40년간 독재를 했다, 라는 것이 저들의 역사 인식입니다. 이 40년간 독재라는게 아, 그런 게 있나? 라고 하시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002년에 검증을 통과해서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로 쓰인 금성교과서에 보면요, 독재라는 말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18쪽 사이에 13번이나 독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13번이나 독재라는 말이 나오고요, 맨 밑에 노란 형광펜을 보면 "40년 독재"를 했다고 나옵니다. 40년 독재를 했다고 나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13번 독재했다고 썼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몇 번 독재했다고 썼겠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 교과서를 직접 분석을 하다가 저희 연구원, 인턴 다 데리고 하다가 제가 이 잡듯이 뒤졌는데요, 금성교과서에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우리만 독재를 했다고 13번 나와요. 40년간 독재했다고. 40년간. 그게 역사인식인데 이번에 완전히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40년 독재를 했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에 우리가 제정한 헌법, 제헌헌법이라는 것이죠. 48년에 제헌헌법은 당시로서는 발마르 공화국에 체계를 들여온 것으로서 서국에 가장 선진적인 헌법을 들여온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었습니다. 서양에 자유민주주의를 그야말로 이식을 한 겁니다. 옮겨 심으려니까 우리의 당시에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건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1948년에요, 우리에게 국민소득이, 개인소득이 60달러, 하루가 아니에요. 년 간, 일 년에 60 달러에서 70달러 사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 이 자료 사진입니다. 이것이 1948년 5월 10일,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최초로 총 선거를 한 사진입니다. 이때 총 선거를 보면 여기에는 안 보이실 것이에요. 국회의원 후보에, 후보가 1,2,3,4,5라고 안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짝대기가 그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 국민들에 80% 가까이가 문맹이었어요. 낫 놓고 기역자는 커녕 아라비아 숫자도 몰라요. 그래서 1,2,3,4,5, 여기 보시면 후보 6번인 사람은 짝대기 위에 다섯 개 쓰고 밑에 짝대기 하나 쓰고 7번은 위에 짝대기 다섯 개 밑에 두 개, 짝대기를 놓고 짝대기 선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해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경제가 성장 발전을 했다고 하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왜 성장 발전의 과정으로 보면서 민주주의는 성장 발전에 과정으로 보지 안 습니까? 우리가 48년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것을 그 공로를 싹 지워버리고 자기들 만에 공로로 돌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독재를 해서 40년 독재를 해서 자기들이 민주화 투쟁을 해서 오늘날에 나라, 한국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서슴없이 깎아 내리면서 또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이 이번 역사교과서 시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안이 북한은 어떻게 감싸고 도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역사교과서 시안에서 북한에 대한 것을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 2015년 교육과정에는 오늘날에 북한에 실상을 알 수 있는 여러 내용을 교과서에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라든가, 삼대세습, 핵문제 뭐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같은 북한의 군사도발 이런 것을 다 교과서에 서술하도록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안은 북한의 오늘날에 실상을 알려주는 내용은 모두 빼버렸습니다. 대신에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발전, 남북화해의 과정 이런 것에 주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70년간 군사도발과 평화공세의 사이를 계속해서 오락가락 했습니다. 한때 평화 운운하면서 대화에 나섰다가도 얼마 안 가서 핵 실험을 되풀이 하던 북한은 이제 핵무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에 평화운운이 평화공세라 불리는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시안은 심각한 북한 주민에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도발 등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교과서에 꼭 들어가야 할 북한 관련 역사적인 사실은 다 빼버린

체 실제로는 변변히 이루어진 것도 없는 남북화해의 과정만을 교과서에 써 넣겠다고 합니다. 보기 싫은 것에는 한 쪽 눈을 질끈 감고 다른 한 쪽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이번 시안에 이러한 보고싶은 것만, 자기가 쓰고싶은 것만 쓰겠다고 서술하겠다는 행태는 또 하나에 역사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시안에 이러한 역사 왜곡에 행태가 중국에 동국공정, 일본에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우리가 그토록 비난에 맞이하던 다른 나라에 역사교과서 왜곡에 행태와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 북한에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와 세습입니다. 그런데 현행 교과서 집필 기준이라든가 2015년 교육과정은 둘 다 북한의 세습체계에 대해 쓰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시안은 삼대세습이라는 용어를 빼버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안은 3대 세습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북한을 어떻게 썼습니까? 사회주의 체제라고 썼습니다.

이번 시안에서 삼대 세습이라는 용어를 빼버림으로서 북한이 세습체제라는 딱지를 떼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또한 삼대 세습대신에 사회주의를 넣어서 북한이 마치 사회주의인 양 포장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라고 쓰면요, 국제사회에 나가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이번 시안이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을 마치 사회주의 체제인 양 포장해 주는 것은 무엇하고 관련이 있느냐 북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북한 헌법을 바꾸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공산주의 규정을 사회주의 규정으로 바꾼 것과 이것이, 우리에게 이번 시안에 사회주의가 들어간 것이 무관하지 않은 것이 북한이 현실에 공산권이 줄줄이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1948년 이후에, 그래서 소련이며 동구권이 다 무너지니까 2009년에서야 자기네 헌법에 있던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싹 떼어버리고 대신에 사회주의로 대체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공산주의라는 말이 없어지고 사회주의가 생기니까 우리에게 이번 시안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북한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그런 것이 들어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삼대세습,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사회주의 체제로 포장해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또 하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제시기에 갑자기 민족운동에 사회주의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일제시대에 사회주의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번에 새로 넣은 것이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일제시기에서 우리가 사회주의 계열에 민족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부분이 우파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좌파, 사회주의 계열에 독립운동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안에 그것을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마치 일제시기에 우리 민족이 마치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운동이라도 벌였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번 시안이 이처럼 사회주의 운동을 학습요소로 새로 넣은 까닭은 무엇이나 이것은 먼저 중고등학생에게 한반도에 사회주의가 일찍부터 존재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나서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로



포장을 해서 내세우게 되면 학생들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서 사회주의 운동을 벌이던 우리 민족이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을 세운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 양 학생들 뇌리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북한을 감싸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나,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올해 2월 초에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기본 조항에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개헌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가 4시간 만에 번복하는 소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말에 나온 역사교과서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아주 빼버렸습니다. 이 시안대로 라면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한 적도 없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독재만 있게 되는 겁니다. 시안을 보시면요, 지난 시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4·19 혁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고 분명히 되어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시안을 보시면 4·19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 '4·19혁명과 그 이후의 정치변화를 살펴보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의미를 탐구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재라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싹 빼버리고 6월 민주 항쟁에 가서 6월 항쟁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파악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렸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이 새 헌법안에서 자유를 빼버렸다가 취소한 해프닝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빼면 북한에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대 최대곤 명예교수는 헌법 학자이신데요.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배제한 민주주의를 거론한 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해 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그 때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역사교과서 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안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서 남한이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포용하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체제는 자칭 인민민주주의인 북한의 주장 그대로 사회주의 체제로 서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에 체제를 바꾸어서라도 남북한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시안대로면 남북한 통일이의 지향점은 사회주의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어서라도 통일만을 이루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 역사의식, 이것이야 말로 1980년대 이후 민주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아래에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따리를 튼 좌파사상이 만들어낸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국사교과서란 모름지기 그 나라에 정통성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교과서 시안은 대한민국을 통일국가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단독 정부로 규정을 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유엔의 결의안 마저도 빼버렸습니다. 이번 시안은 유엔의 승인 사실을 교과서에서 아예 빼버리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놓고 부정을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도록 획책하는 꼴입니다.

이 한반도에 야경, 위성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울 주변에는 불야성을 이

롭니다만 북한은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양 주변만 조금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한반도에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남한이 40년 독재를 했다, 더욱이 남북한이 남한이고 북한이고 똑같이 독재를 했다, 그렇게 된다면 남한은 어떻게 해서 세계 10위권에 번영을 구가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또 세계인들이 지목하는 불량 국가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현재를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현대사가 제대로 구실을 못한 것이죠. 현대를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 된 교과서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어떻게 이룩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이었기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근간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관해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야합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이 공산주의 체제로 북한 정권을 출범시킨 것 보다 얼마나 우월한 선택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역사교과서 시안은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기는 커녕 가증한 방법으로 헐뜯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온갖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감싸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시안은 남한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림으로서 인민민주주의를 포용하도록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체제로 서술하도록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 정체성을 바꾸어서라도 사회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앞장서서 그 나라에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정체성까지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 나라입니까! 누군가가 지적했듯이 죽은지 오래된 마르크스에 유령이 유독 한반도를 배회하면서 대한민국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마르크스에게 패배할 일은 없으며 결코 패배해서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